

책을 열며 / 거래의 등불이 되자 / 배종렬

시론 / 부시의 재선과 한반도의 평화 / 이재봉

시론 / 주한미군 경비지원 특별 협정은 폐기돼야 한다 / 공동길

투쟁현장 /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절대 안돼! / 윤현수

번역글 / 미국의 전쟁청부기업\_ 팽창하는 신군사기업, 군산복합체 / 오쿠무리 니이치, 번역: 김현희

특집 / 평통사 창립 10주년을 되짚어본다\_ '평화'와 '통일'은 하나 / 임종철

특집 / 사진으로 보는 평통사 10년

특집 / “평화와 통일의 길, 함께 가요” / 평화단체가 보는 평통사

특집 / “평통사가 있어 내가 있다. 내가 있어 평통사가 있다” / 회원들이 보는 평통사

자료실 / 용산협정이 국회비준동의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 유영재

자료실 / 용산기지 이전비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 | 책을 열며 |

창립10주년을 맞아 민족자주평화운동의 발전에서 평통사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공동대표 배종렬

평통사 창립10주년을 맞아 늦깎이인 제가 회지에 여는말씀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동안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민족민주운동진영내에서 빛도 영광도 없이 10년을 올곧게 달려온 겨레의 등불들이다.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지난 6,15공동선언이후 남북이 상호 적대관계를 해소하면서 금강산 개방, 개성공단건설, 철도연결, 금강산육로개통,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내년 분단 60주년을 통일원년으로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 정세는 그렇지가 못하다.

무엇보다 조지 부시의 미대통령 재선이 한반도 평화에 암운을 예고한다. 한반도의 평화실현에는 무엇보다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무력화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서 북이 선택폐기만을 강요하고있다.

요즘 미국이 자행하는 한반도 공멸을 가져올 전쟁 정책, 미군의 동북아기동군화, 110억불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첨단무기화계획, 주한미군 평택 이남으로의 이전과 MD구축, 북한인권법의 제정, 조선일보 등에 보도되었던 5026~5030등의 대북작전계획 등은 우리겨레에게 몹서리치는 미국의 가공할 움직임이 아닌가? 이에 더해서 미국의 전쟁정책에 작동되는 한미동맹의 강화와 노무현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미명하의 군사력의 증강계획은 북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여기에 일본 고이즈미 정권의 대북정책이나 중국의 동북공정은 북에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평통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첫째 자주화운동에는 통일연대 등 평화통일세력과 함께 민간교류를 확대하여 남북긴장을 완화하고 남북이 각 분야에서 하나임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확인시키는 일이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해서 작전권의 회수에 의한 자주국방을 실현하여 미국의 전쟁정책에 제동을 가하도록하고, 한미동맹보다 남북공조를 실현하도록 요구하는 일이다.

둘째 평화운동에서는 전문화와 전국화와 대중화를 다짐하고 있다

1) 전문화는 평화·통일연구소를 개소했으니 전문연구진의 연구와 함께 전회원의 이론무장이 요구된다.

2) 전국화는 약체 지방조직을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미개척지역의 개척에도 힘썼으면 한다

3) 우리에게는 그동안 6월항쟁의 경험과 매항리싸움, 부안핵폐기장싸움 등 대중투쟁의 교훈이 살아 있다. 현재 진행중인 굴욕적인 용산협정 국회비준 반대 싸움, 광주패트리엇 설치 반대 투쟁을 활성화 하는 일과 이라크 파병연장반대투쟁에 헌신하자. 대중화를 위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가족단위나 그룹단위로 참여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방안들이 개진된다.

존경하는 전국에 계시는 회원 여러분! 자주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동포여러분! 우리 모두 자주평화통일의 내일을 위해 함께 매진하자! 통일의 그날까지...

부시의 재선과 한반도의 평화  
-미국의 압박과 북한의 반발에 대한 남한의 선택은?-

이 재 봉

원광대학교 정치학/평화학 교수  
남이랑북이랑 더불어살기 위한 통일운동 대표

부쉬가 4년 더 미국 대통령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부쉬가 재선되며 머지 않아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게 될 것 같다는 이른바 ‘미국발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았다. 험악해진 북미 관계와 가로막힌 남북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긴장과 우려를 갖게 하는 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미국의 강경하고 호전적인 대북 정책에 경각심을 지니면서도 북한에 대한 폭격이나 직접 침략은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처지에서 북한이 결정적으로 도발하지 않는 한 제 3의 전쟁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미국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며 침략의 목표였던 빈 라덴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라크를 침략해서 후세인을 생포하는 등 목표를 이루는 듯 했지만, 미군의 사상자 수가 끊임없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저항 세력의 반발은 그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이 미국의 압박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더라도 미국이 선뜻 북한을 폭격하거나 침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쉬의 핵심 참모들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이라크와 북한은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이라크에는 미국이 탐내온 석유가 풍부하지만 북한에는 미국이 탐낼만한 자원이 거의 없다. 둘째, 이라크는 미국에 맞설만한 군사력을 거의 갖추지 못했지만 북한은 미국에 어느 정도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 셋째, 이라크 주변에는 대부분 약소국들이 자리잡고 있어서 미국의 침략 전쟁을 적극적으로 막기 어려웠지만, 북한 주변에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강대국들이 미국의 침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고, 특히 현재 남한의 집권층이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 거듭 강조하자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이라크에서는 얻을 것이 많고 잃을 것은 적었을지라도 북한에서는 얻을 것이 적고 잃을 것이 많을 텐데, 북한에 대해 쉽게 전쟁을 벌이겠는가.

그렇다고 부쉬 정부가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북한을 그대로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부쉬가 4년 전엔 국민 투표에 의해 선출된 게 아니라 법원에 의해 선택된 ‘반쪽 대통령’으로 출발했지만, 이번엔 더 많은 국민의 표를 받은 데다 상하 양원에서 공화당 의석 수가 늘었기 때문에 더 큰 지지와 정당성을 바탕으로 북한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처럼 폭격이나 침략 등의 직접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북한을 무너뜨리지는 못할지라도, 내부에서 경제난과 사회 혼란 등이 일어나도

록 이끌어 김정일 체제 붕괴를 피할 것 같다.

예를 들어, 2003년 7월 부분적으로 공개된 미국의 광작전 계획 5030책은 미군 정찰기들을 북한 영공 가까이 비행시켜 북한 전투기들의 대응 출격을 유도함으로써 부족한 연료를 바닥나게 만들거나, 한반도 주변에서 몇 주 동안 기습적으로 군사 훈련을 실시하여 북한이 대피 훈련을 하게 함으로써 식량을 비롯한 전쟁 비축 물자를 다 써버리도록 이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과 직접 전투를 벌이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그리고 2004년 10월 발효된 광복한 인권 법안책의 주요 내용은 미국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강화하고 탈북 지원 단체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며 탈북자의 망명을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부추겨 사회 혼란을 통한 체제 붕괴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중상 모독하고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 제도의 붕괴를 노리는 미국의 진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내놓은 또 하나의 대조선 적대선언”이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또한 이 법안을 다음과 같이 핵문제와도 연계시키며 당분간 6자 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미국은 우리와의 공존을 전면 부정하고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말살하려는 무분별한 단계에 들어섬으로써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의미를 상실케 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서 핵문제에 대한 6자 회담은 고사하고 미국과 상종할 그 어떤 명분도 없게 되었다.” 당분간 북미 관계가 전혀 호전될 수 없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인 것이다.

한편, 2000년 6월 정상 회담을 통해 크게 진전되어오던 남북 관계도 2004년 7월부터 꿈꿨던 열어붙어 있다. 7월 초엔 남한 정부가 김일성 사망 10주년을 맞아 조문하려던 통일 운동가들의 방북을 불허하고, 7월 중순엔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은 북한의 해군 함정에 남한 해군이 포격을 하였으며, 7월 말엔 베트남에 머물던 탈북자 460여명을 서울로 데려온 것 등과 관련하여 북한이 거의 모든 남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8월 말 실시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북침 책동’이라고 비난했으며, 9월 불거진 남한의 과거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남조선의 비밀 핵실험 사건의 진상이 해명됨이 없이는 북남 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10월 국정 감사를 통해 남한 정부의 북한 유사시 대비책인 광충무 계획책이 알려지자 북한은 다음과 같이 더욱 격렬하게 남한 당국을 비난했다. “남조선 당국은 겉으로 화해니 협력이니 하지만 뒤에서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에 편승해 우리의 체제에 도전하면서 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또한 10월 중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발의한 국가보안법 대체 법안에 대해, 기존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인 반국가 단체의 개념을 더욱 확장시킨 반통일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남조선에서 무슨 법이 나오든 기존 보안법의 잔재가 단 한 조항이라도 남아 있어도 북남 관계의 진전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험악해진 북미 관계에 덧붙여 열어붙어 있는 남북 관계도 당분간 풀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한

미 동맹 관계 때문이다. 남한은 미국을 가장 가까운 동맹 국가로 여기고 있는데 미국은 북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의 하나로 삼고 있어서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킨다는 것은 언뜻 모순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남한 내부에서 대체로 진보 계층에서는 ‘민족 공조’를 앞세우며 한미 관계가 느슨해지더라도 남북 관계가 진전되기를 바라고, 보수 계층에서는 ‘한미 동맹’을 내세우며 남북 관계가 꺾끄러워지더라도 한미 관계가 굳건해지기를 원하는 이중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미 관계가 우호적으로 바뀌면 ‘민족 공조’와 ‘한미 동맹’이 양립할 수 있겠지만, 두 나라 사이의 강경 대치가 지속되면 한미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그렇다면 남한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할까. 미국은 적대국인 북한이 사라지는 것만으로 만족을 느끼겠지만, 남한은 그 뒤의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과정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만에 하나 북한이 붕괴될 경우 남한 사회에 초래될 결과 딱 한 가지만 예를 든다. 탈북자 또는 북한 난민들의 생활이다. 2004년 10월 현재 남한에는 약 5500명의 탈북자들이 살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고급 정보를 지니고 왔다고 해서 남쪽 정부로부터 많은 돈과 높은 자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여 성공한 사업가도 있으며, 유명해진 학자나 연예인도 있는데, 이렇듯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10% 안팎이다. 대부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니라, 이들의 숫자가 1000명도 되지 않아 웬만큼 대접받던 1990년대 말에도 그랬다.

이들은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올해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살고 있는 탈북자의 80%가 극심한 빈곤으로 정부의 기초 생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탈북자 교육 기관인 하나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들 가운데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들은 겨우 15%에 머무르고, 약 40%가 임시직이나 시간제 등 불안정한 돈벌이를 하며, 40% 이상이 무직 상태이다.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80%가 한 달 평균 100만원 미만을 벌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보다 심리적 고통을 더 심하게 겪는 듯하다. 이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냉대가 지나친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남한에 들어온 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으며, 이후에는 정부나 탈북 지원 단체 또는 직장 관계자 등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차별이나 임금 체불 또는 성폭행 등을 당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40%가 현재의 남한 생활에 큰 불만을 품고 있으며, 70%가 캐나다나 호주 또는 미국 등 다른 나라로의 이민을 바란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합법적으로 북한에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탈북자들이 30%를 넘는다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는 실제로 도둑이나 강도 같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생겼고, 다시 남쪽을 탈출하려다 붙잡힌 사람들도 나타났으며, 심지어 목숨 걸고 들어온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나온 게 아니겠는가. 기껏해야 수 천명도 제대로 껴안지 못해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언젠가 북한 사회가 무너져 수십만 수백만이 남한으로 몰려온다면 어떤 참사가 빚어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따라서 남한은 미국의 북한 붕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한편, 요즘 정치권 일부에

서 거론되고 있는 남북 정상 회담을 추진하여 핵문제 등 한반도에서의 갈등 요인을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 ‘주한미군 경비 지원 특별협정’ 협상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공동길 평화군축팀 부팀장

지난 10월 21일 외통부에 전달된 ‘주한미군 경비 지원 특별협정’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를 옮겨 신습니다.(편집자주)

- 한미 양국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이하 주한미군 경비 지원 특별협정)’의 갱신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 이에 ‘주한미군 경비 지원 특별협정’(일명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평통사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1991년 이후 주한미군 경비지원금의 수직 상승은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되고 있습니다.**

○ 1991년 ‘주한미군 경비지원 특별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은 91년 835억 원(1.5억달러, 당시 환율)에서 그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에는 7,469억 원(6.2억달러, 집행액 기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의 국방비가 154% 증가한데 반해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은 무려 794%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1.12%에서 2004년 3.94%에 이르고 있습니다.

· 국방예산 대비 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예산 추이(표-1)

(단위 : 억원, %)

구분	1991	1993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국방예산	74,524	92,154	110,744	137,865	137,490	144,390	153,884	163,640	175,148	189,412
방위비 분담금	835	1,694	2,400	2,904	4,004	4,244	4,934	5,689	6,559	7,469
점유율	1.12	1.84	2.17	2.11	2.91	2.94	3.21	3.48	3.74	3.94

(자료 :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4년 통계는 평통사에서 추가)

- 또한 미 국방부가 매년 미 의회에 보고하는 ‘주둔국 미군 주둔비용 분담 보고

서(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200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1년도 주한미군 지원비는 8.05억 달러(간접지원 포함)로 GDP 대비 0.16%입니다. 반면 일본의 미군지원비는 GDP 대비 0.11%, 독일은 0.04%여서 우리나라는 경제적 부담 능력(GDP)에 비해 일본에 비해서는 1.5배, 독일에 비해서는 4배나 과중하게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 미 국방부 평가 주둔국 지원 현황과 GDP 대비 분담율(표-2)

(단위 : 백만달러)

구분	한 국			일 본			독 일		
	1999	2000	2001	1999	2000	2001	1999	2000	2001
직접지원	324.65	432.90	420.33	3,957.1 9	3,877.2 9	3,456.6 3	33.59	88.85	8.21
간접지원	397.19	363.38	384.65	1,223.8 5	1,125.9 0	1,158.2 2	1344.13	1,122.4 6	853.45
<b>총 액</b>	<b>721.84</b>	<b>796.28</b>	<b>804.98</b>	<b>5,181.0 4</b>	<b>5,003.1 8</b>	<b>4,614.8 5</b>	<b>1377.72</b>	<b>1,211.3 2</b>	<b>861.66</b>
GDP대비 분담율(%)		0.16	0.16		0.11	0.11		0.10	0.04

(※ 자료 참고 : 『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2003, 2002, 2001), 미국 국방부. GDP는 OECD 집계)

○ 이 같은 사실은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이 국방비는 물론이고 우리 국가 재정에 얼마나 부담을 가중시켜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 주한미군 경비분담금을 포함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을 위해 지원하는 직·간접비용은 매년 평균 19억 달러를 넘습니다.

○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지원비는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 특별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경비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수 천만 평에 달하는 기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미군에게 제공하고 있고, 각종 세금과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또 4,800여 명의 카투스(KATUSA) 인력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방백서(1999)’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게 지원한 이들 간접지원 평가액만 1997년도에 17.9억 달러, 1998년도에 12.8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1997년도와 1998년에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지원한 직·간접비용은 각각 22.0억 달러, 16.3억 달러로 평균 19억 달러를 넘습니다.(국방백서, 1999)

· 1997, 1998년도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현황(표-3)

(단위 : 만달러)

구분	내역	1997	1998
직접지원	현금지원	36,447	31,489
	운영유지	980	704
	군수지원	2,045	2,002
	시설부지지원	342	354
	합 계	39,814	34,549
간접지원	면세, 사용료 등	18,028	16,093
	인력지원(KATUSA)	5,993	6,769
	부동산 지원	155,700	105,800
	합 계	179,721	128,662
총 계		219,535	163,211

(※ 자료 참고 : 『국방백서, 1999』, 국방부, 부록 24)

■ 반면 미국은 우리나라로부터 매년 19억 달러가 넘는 주한미군 지원비를 지원 받고도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지원비를 대폭 축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직·간접지원비에 대한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의 평가액 비교

(표-4)

(단위 : 만달러)

구분	한국 국방부		미국 국방부			
	1997	1998	1997		1998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직접지원	39,814	34,549	35,040	37,288	34,910	36,497
간접지원	179,721	128,662	38,584	38,584	40,221	40,221
총 계	219,535	163,211	73,624	75,872	75,131	76,717

(※ 자료 : 『국방백서, 1999』, 『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1999. 2000』)

○ 미 국방부는 1997년도와 1998년도의 우리나라의 간접지원액을 각각 3.8억 달러, 4억 달러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 기간 우리나라 국방부가 평가한 주한미군 간접지원비의 1/4에 불과합니다.

○ 우리는 미 국방부가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간접지원비를 의도적으로 축소 평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미 국방부 스스로도 1995년도 우리나라의 간접지

원비를 14.3억 달러로 평가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간접지원비의 대부분은 부동산지원인데 1995년 이후 주한미군기지가 거의 반환된 바도 없고, 부동산 가격과 물가는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간접지원비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수는 없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설령 내려간다고 해도 미 국방부 평가와 같이 2년만에 갑자기 1/4로 내려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을 위해 약 4,800여명에 달하는 카투사 인력지원(국방부 평가금액 2001년 0.92억 달러, 2002년 1.02억 달러)을 하고 있음에도 미 국방부는 아예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미 국방부의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지원비에 대한 축소 평가는 우리나라로부터 더 많은 주한미군 경비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한 의도적인 것입니다.

■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까지 용산기지이전과 미2사단의 이전을 위해 최소한 5조4천7백여원(정부 추산)을 주한미군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용산 이전이 완료되는 2008년까지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과는 별도로 3조9천5백71억 원(정부 추산)을 이전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약 9천3백37억 원(정부 추산)을 분담해야 합니다. 또한 2004년도에만 이라크 파병비용으로 2,87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직·간접지원비와 주한미군재배치에 따른 이전비용을 합해 매년 30억 달러 이상을 주한미군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 ‘주한미군 경비분담 특별협정’은 한미 SOFA 5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우리보다 먼저 ‘특별협정’을 체결한 일본의 선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 애초에 ‘주한미군 경비지원 특별협정’은 한미 SOFA 5조의 “주한미군의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체결된 협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SOFA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경비지원 특별협정’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 1991년 미국은 일본의 선례를 들며 ‘주한미군 경비지원 특별협정’ 체결을 우리나라에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과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주일미군의 경비를 지원하게 된 배경과 우리나라의 배경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1985년 일본의 대미혹자 경감을 목적으로 한 ‘플라자합의’ 결과 엔화 가치가 1985년 1달러당 237엔에서 1987년 163엔으로 평가절상되었고(이후 엔화는 계속 상승하여 1995년에는 1달러 당 80엔까지 상승), 이에 따라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일미군의 현지발생비용이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엔화로 지급되는 주일미군기지 일본인 고용원의 인건비 상승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일본은 미국과 특별조치협정을 체결하여 주일미군의 경비를 분담하게 되었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 270-271쪽)

반면 우리나라는 1990년 1달러 당 712원에서 1995년 770원, 1998년 1394원, 2003년 1191원으로 지속적으로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 되어(자료: 한국은행) 주한미군의 현지발생비용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경이 상반되는데도 미국이 일본의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의 경비 지원을 강요한 것은 강대국의 억지였습니다.

■ 더욱이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 변경으로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경비를 분담할 이유는 더욱 없어졌습니다.

○ 더욱이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의해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이 대북 방위에서 미국의 동북아 패권추구를 위한 지역군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경비를 분담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 또한 ‘지역군’으로의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의 변경은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을 대한민국으로 제한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특별조치협정에 의한 주한미군 경비 분담 역시 위법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은 우리나라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을 제외하고서도 천문학적 규모로 주한미군을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주한미군 경비 지원 특별협정은 한미 SOFA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이 대북방위에서 동북아 패권추구를 위한 지역군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경비를 우리가 분담할 이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 ■ 우리의 요구

정부는 위법적이고, 부당한 ‘주한미군 경비 지원 특별협정’의 갱신 협상 계획을 중단하고 ‘주한미군 경비 지원 특별협정’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절대 반대

윤현수(경기남부평통사(준) 준비위원)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 공동대표)

미군기지의 이전문제는 6공화국의 노태우정권이 용산기지의 지방이전을 거론하면서 처음에는 대전으로 이전한다고 하였다. 이에 충남, 대전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다시 이를 거두었다가 1990년초에 평택이전을 언론에 흘려서 발표하였다. 그후 평택시민들도 시민모임등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반대하였다. 이러한 반대운동의 영향과 정권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김영삼정권이 들어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한미양국은 이를 보류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이 지역에서 잊혀질 만하니까 이번에는 용산기지에 한술 더떠 동두천 미2사단까지 더 얹어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발표에 지금 평택은 말 그대로 발각 뒤집혔다. 설상가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으로 집결시킨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주한미군의 허브기지란다. 기존의 기지, K-55 오산공군기지과 K-6 캠프험프리 합하여 450만평의 땅에 더하여 349만평을 합하면 8백만평이 되며 거기에다가 경기도와 정부에서는 500만평의 국제평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택지역이 약1억3천6백8십만평의 땅인데 그중에 미군기지가 800만평이 되고 국제평화도시가 다시500만평에 기존 기지촌 구역이 안정리와 송탄 100만평씩 약200만평만 잡아도 미군기지와 배후도시와 기지촌을 다합하면 1500만평이 되고 이는 평택시 전지역의 11%나되는 면적이라니 입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방부에서 토지수용지역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지원법공청회 등을 형식적으로 열며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으나 주민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전 대상지역의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이전 반대집회를 해를 넘겨 진행하고 있고 서울의 국방부나 용산기지로 원정집회도 십수차례 가진 바 있다. 지난 8월말에는 팽성읍 안정리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천여명의 주민들이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주민총궐기대회를 갖고 주민대표들이 혈서를 쓰고 삭발을 하며 항의 서한을 미군기지로 전달하였다. 그 이후 요사이 수용지역주민들은 매일 본정리농협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이러한 우리지역의 미군기지 확장반대 움직임에 대하여 일부언론과 비판자들은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하여 미군이 존재하여야 하는 바 평택시민들의 양해를 바라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안다.

평택지역은 지금 중국등을 겨냥한 동북아의 물류와 첨단산업의 중요한 전진기지로 발전할 처지에 있고 기존의 농업과 더불어 상공업이 어울어진 산업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육상과 해상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인 것이다. 부산 인천항에 이은 규모로 건설되는 평택항의 건설은 대중국 무역 전진기지로써 4단계공사가 끝나는 2020년에는 총97선석의 부두건설이 계획 건설되고 있으며 완공시는 1년에 1억2천4백만톤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국내 3대무역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의 중간지역으로서 최근에는 삼척울진쪽의 동해로 연결되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평택항을 기점으로 충북쪽으로 뻗어가고 있으며 경부고속전철이 관통하고 1, 38, 45, 80번 국도등 4통팔달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둘째는 이제 거의 들어찬 포승공단과 어연, 한산, 추팔, 평택, 송탄공단등의 크고 작은 공

단과 평택항에서 선적되는 남양만의 기아차, 아산 현대차, 평택의 쌍용차, 만도 한라등 자동차공업과 각종 소재, 부품산업이 부가가치를 높이며 가동되고 있다.

셋째는 드넓은 곡창지대의 농산물 특히 쌀과 배와 과실채소등은 그 성가가 꽤 높다. 미군 기지로 새로 편입하려는 팽성지역의 280만평은 전부 경지정리가 완비된 수리 안전답이며 평택에서도 농사 짓기 좋고 소출 많이 나고 밥맛 좋은 양질미의 생산지대인 것이다. 도두리 별관 280만평의 쌀 생산량이면 60만의 안양시의 인구가 1달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인 것이다.

넷째로 평택농악을 비롯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하며 서해대교 평택항 ,평택호등 관광자원의 무한한 개발가능성과 풍부한 노동력이 합하여 지역 전체가 산업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있는 처지이다.

이러한 모든 성장 발전요소도 평택이 미군의 허브기지로 변한다면 모두 다 제약을 받고 끝내는 탄력을 잃고 군사도시로 재편되는 안타깝고 암울한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예측해 보면 첫째 편리한 육상, 해상 교통망의 변화이다.

주한미군중 지상군 병력의 대부분이 평택으로 몰려옴으로 인해 모든 육상 교통로(3개의 고속도로, 경부선철도, 고속철도, 국도 지방도등)는 혼련과, 작전, 그리고 전배속등의 군병력과 물자의 수송로로 급속히 재편될것이다. 지금도 공안교와 팽성대교 사이에 강변도로가 개설 되었는데 그 효용가치를 따져볼때 안정리와 송탄기지를 가깝게 연결하기 위해 시급히 건설한 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강변도로 특성상 관광유람을 위한 도로라면 강변쪽 쪽보다 낮아 차량에서 강변이 보이지 않게 설계 했을 리가 없고, 또 전체 강변 구간중 그 구간만 떼어 시급히 도로를 건설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이는 도로건설등의 지역개발 예산이 지역사회 행정 산업도로의 효용 가치 위주로 쓰이지 않고 엉뚱한 미군의 군사 작전용도 중심으로 가중치가 주어져 재편 사용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미군기지의 대규모 확장으로 인하여 국책사업으로 아이엠에프 이전부터 엄청난 투자를 해왔던 평택항과 포승국가공단 그리고 제2영동고속도로와 연계교통망, 새로 내준다는 고속전철 평택역까지 모든 사회간접자본과 확충된 인프라는 주한미군의 전유물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대규모 투자로 이루어놓은 국가적인 큰 자산이 빛을 잃게 되고 속된 말로 죽 썰서 뒤희는 형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둘째는 크고 작은 각종 공단이나 기업체에서 우리 지역에 오기를 꺼려하고, 있던 기업도 떠나려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재투자 혹은 설비투자가 감소할 것이다. 이번에 미군기지 이전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평택의 미군허브기지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되고 평택기지는 중국군대, 북한군대의 중장거리 미사일의 표적이 될 것이며 일단 전쟁이 터지면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단기전이든, 장기전이든 우리 지역은 그대로 불바다가 될것이다. 누가 이러한 화약고 옆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산업시설을 증설할 것인가? 또한 전쟁 위험을 차치하더라도 남한 미군의 대부분을 모아다 놓은 지역인 평택의 도로에는 미군용차, 장갑차, 전차등으로 넘쳐나고 곳곳마다 작전, 혼련중인 중무장한 미군이 눈에 떨어 것이다. 이러한 긴장된 지역 분위기는 평화로운 산업생산의 분위기를 해칠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할 것이다.

셋째로 평택의 곡창인 도두리 별관이 그대로 미군기지로 편입되고 밥맛 좋은 평택쌀의 미질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땅을 수용당하는 농민들은 대충 3부류로 나누어 볼수있다. 자신의 집과 대부분의 농지(자경과 임대모두포함)가 모두 수용되는 경우는 이주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집만 들어가고 농지는 그대로 있는 경우와 그 반대

인 경우에는 이주하여 영농기반을 만들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남아 있는 것을 처분할 경우에는 매물이 많아 가격하락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은 대부분이 가격이 오를 것이다. 또한 영농기반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돈만 있다고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농 기반중 시설투자에 해당하는 농기계나 보관창고, 저장시설, 창고등은 허름하고 싼 것일수록 수익성이 높다. 그러나 외지로 이주하여 새로 구축할 때에는 허름한 것에 대한 보상가의 몇배를 들여야 하고 그러다 보면 부채증가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외지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영농조건과 품앗이 두레(농작업 조직)에 편입되어야 하는데 이는 돈 갖고도 살 수 없는 문제이다. 농촌에서는 아직도 타동받이니 텃세가 심하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의미있게 나눈다. 외지에서 이주해 와 동네의 두레 편입을 못해서 한 두해 농사를 그르치는 경우가 농촌에는 종종 있다.

넷째는 시민생활 의식과 문화예술활동의 왜곡과 위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의 용산과 이태원과 동두천과 기존 평택의 안정리, 송탄의 기지촌을 다 합해 놓은 대규모의 심화된 기지촌의 형성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시민의식과 문화 예술의 왜곡과 위축이 심각할 것이다.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전통문화의 창의적인 계승을 통한 현대문화의 창달을 말함입니다. 이속에 외래의 저질적인 요소가 가미됨을 뜻함이다. 또 밀려오는 외래문화와 외래어속에 우리 전통문화나 심지어 언어까지 경시하는 풍조가 생긴다면 정치군사적 종속과 아울러 문화적종속이 심화되지 아니할까 염려되는 바 크다.

다섯째 미군기지로 인해 오는 우리지역의 사회 불안 문제이다. 특히 기지촌 지역의 치안 부재 현상이다. 이는 공무와 비공무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범죄, 사건, 사고, 민간시설의 손괴등의 다발을 지적함이다. 우리보다 성이나 폭력등에 노출된 환경에서 성장한 미군들이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군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절제할 인내심을 요구하는 부분이 오히려 무리인 듯이 보인다. 그것은 그동안 자행되어온 범죄 건수와 범죄유형과 수법등을 놓고 볼때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같은 군대라도 한국군에게는 범죄를 저지르면 검거되어 처벌된다는 것 때문에 범죄의 충동에도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 밖에 없지만 미군의 경우에는 다르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우리 국민에 비하여 월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을 낮춰 볼려는 성향이 있다. 그들은 신체적 조건이 우리 보다 대개 크고 장대하다. 또한 우리 나라보다 국력이 우세하고 우리를 도와 주러 왔다는 시혜의식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그런 바탕위에 범죄 예방 효과가 전혀 없는 '주둔군지위에 관한 행정협정(이른바 소파)'의 불평등성이 큰 문제이다. 이는 2년전의 '미군장갑차여중생압사사건'의 발생과 처리과정만 보더라도 명백하기에 여기서 더 설명하지 않겠다. 우리정부와 미군당국이 맺은 소파는 미군당국이 2차대전 전범국인 독일이나 일본과 맺은 행정협정에 비하여 엄청나게 우리에게 불리하기 이를 데 없다. 미군의 사기를 고려 자국군대의 범죄를 눈감으려는 미군당국과 이를 용인하려는 한국정부의 의식이 변하지 않은 것은 기지 주변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 다수가 순진하게 믿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존재가 과연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한 것 인지, 아니면 미국의 세계지배 전략의 일환으로 존재하는 것인지는 논외로 하자. 그 두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우리에게 미군은 점령군은 아닌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점령군이나 누릴 법한 행정협정을 정부당국이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독립한 주권국가의 자존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행복권을 지나치게 유린하는 것이라고 본다.

셋째로 현행 행정협정 범위내에서도 한국의 사법과 치안당국의 통번역 시스템 구축 미비 등 준비부족과 의지없음으로 범죄미군에 대하여 사법권 행사 기피가 문제이다. 만일 평택지역이 미군의 허브기지가 되어 미군범죄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평택시 경찰관의 10%라도 영어의 해독이나 회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소과규정에 대해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미군기지의 무책임한 환경오염 증가와 주민들의 소음피해의 증가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지하고 오염에 대한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는 환경주권의 상실이 큰 문제이다.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은 평택에선 여태까지 일상화 되다 시피한 일이었고 소음에 대하여 여태까지 배상이나 사과 한번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해결된 적이 없었다. 만일에 미군기지 면적이 2배 가까이 되면 환경오염과 소음공해등은 2배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해악과 주민생활의 저해요소를 그대로 감수하고 미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양해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목숨과도 같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성장잠재력을 그대로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분권자치를 내세우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한국의 모든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겠다는 무모한 발상을 거두어야 할 것이며 여태까지 미군기지의 소음과 공해 그리고 범죄로 인해 입은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 위로하여야 할 것이다.

또 미군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협정이 충분히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때까지 소과의 미군범죄 재판 관할권 등의 불평등 조항을 개정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전 규모나 비용도 확정시키지 못하고 거액을 들여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지 말고 그러한 예산이 있으면 우리 군을 현대화하고 방위력을 증강시켜서 미군철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군은 우리 나라의 군대가 아닌 이상 우리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 자체의 이해와 필요에 따라 언제든 예고없이 움직이고 철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 번역글 |

## 미국의 전쟁 청부기업

-팽창하는 신군사기업·군산복합체-

이 글은 일본의 『軍縮問題資料』(2004년 5월호)에 실린 오쿠무라 니이치씨의 글을 번역한 것이다 - 편집자주 -

### 1. 네오콘 ‘제국’의 군사현황

이라크를 단독으로 침공한 미국은 신보수주의의 신제국주의론에 따라 이라크에 서양식 민주주의를 건설할 것임을 다짐하는 가운데 석유증산과 군사강국화(중동의 군사기지화)를 서두르고 있다. 부시가 재선되면 미연방정부의 군사비는 임기 8년 동안 3조2천억 달러(인플레이션 감안하여 산정함)가 되는데 이는 클린턴 집권 8년간의 군사비보다 5천억 달러가 더 많은 것이다. 백악관 예산담당자는 실질 달러가치로는 제 2차 세계대전 8년간(41~48년)의 3조1천억 달러보다 더 많다고 추산한다.

이라크, 아프간만이 아니라 필리핀, 라이베리아,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군사적 상황은 마찬가지로 미군은 전 세계의 광범한 불안정지역에 넓게 장기간 주둔하고 있다.

### 2. 민간 군사기업 (PMC)의 활동

미국은 점점 넓어지는 ‘신제국’을 지키고 군사적 우위를 활용할 수 있게끔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최첨단무기(an awesome array of new high-tech Weapony)’를 개발하고, 수 십개의 민간 군사기업 (Private Military Company)의 연구자나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것을 활용해 보도록 하였다.

이라크를 점령한 14만 미군과 2만2천 영국군의 단기간의 전투승리와 안전한 석유확보는 군사 사기업을 활용하는 것이 성과적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디지털 전쟁, 컴퓨터 네트워크전쟁으로 불리고 석유파괴도 거의 없었던(걸프전 때는 320곳에서 화재

가 났다) 2차 이라크전쟁은 컴퓨터 서비스, 유전 서비스 등의 업무를 민간기업에게 크게 의존하였다. 럽스펠드 국방장관, 체니 부통령과 부시대통령은 물론 파월 국무장관까지도 펜타곤과 관계가 깊은 기업의 사외(社外) 또는 사내(社內) 임원을, 때로는 최고경영자를 지냈다. 그들은 ‘미국주식회사’의 경영전문가(테크노크랫) 시각으로 펜타곤을 경영하고 있다.

사업가 출신의 럽스펠드 국방장관은 펜타곤의 CEO(최고경영자)로 불리며 미군 장비의 하이테크화, 민간 하이테크기업의 군사기술 접목과 민간기업의 활용을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90년 들어서부터 하이테크·디지털·네트워크 전쟁이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91년 걸프전쟁 때는 전쟁터의 병사 100명당 1명이 민간기업에서 온 기업

전사였지만 제2차 이라크전쟁 때는 10명당 1명 이상(13%)이 기업전사였다. 게다가 이라크 점령 이후에도 전투원이 남아서 점령지의 치안유지와 재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의 세계정세 하에서는 군복을 입을 필요가 없는 기업전사의 수비 범위가 넓어진다. 유전 경비와 재건, 송유관 설치, 대테러 방위는 이라크전쟁에서 끝없이 계속되는 일이지만 그것들은 헬리버튼의 케록 브라운 앤드 루트 (KBR), 벡텔 등의 독무대라고 할 수 있다. 민간기술을 전용한 하이테크병기·첨단기술집약 (IT)무기의 운용은 민간엔지니어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IT거품 붕괴와 과잉 서비스 공급 하에서 가격인하경쟁에 시달리는 정보통신업계로서도 펜타곤은 ‘지옥에서 만난 부처’로 비칠 지 모른다.

2003회계연도 국방부사업 수주액 중에서 1위 록히드마틴(219억 달러), 2위 보잉(173억 달러), 3위 노스롭 그라만(111억 달러), 4위 제네럴 다이내믹스(82억 달러), 5위 레이시온(79억 달러), 6위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45억 달러)는 예년 그대로 군산복합체의 과점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KBR(39억 달러)이 7위에 올라 2002년도의 37위에서 급상승하였다. 8위의 GE(28억달러)에 이어 사이언스 애플리케이션 인터내셔널(26억 달러)이 9위를, 컴퓨터 소프트웨어 컨설턴트회사인 컴퓨터 서비스(CSC, 25억 달러)가 전년도의 21위에서 10위로 급상승하였다.

CSC는 펜타곤과 연결된 PMC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프간의 현지군사 서비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다인사(Dyn Corp)를 2002년 말에 10억 달러에 매수하였다. 다인사는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의 경호를 맡아 암살을 미리 막은 것으로 유명하다

실리콘 벨리의 떠오르는 통신기업(Upstars)인 L-3 커뮤니케이션 (L-3 communications)은 1987년에 퇴역 고급군인집단이 창립하였다. 이 기업은 현재 세계의 몇 십 개 국 이상에서 활동하며 고도의 군사컨설턴트나 훈련·교육을 실시하는 회사인 MPRI(Military Professional Resources Incorporated)를 2000년에 3500만 달러에 인수하였다.

### 3. 이라크전쟁 때 민간 군사기업(PCM) 급성장

펜타곤은 10년 사이에 그 전략목표가 코소보, 카불, 바그다드로 바뀔 때마다 전투능력을 고도화·강화시키고 더 많은 군사업무와 작전과정을 아웃소싱1) 하게끔 되었다.

큐빅, KBR, 백텔, 비닐, 다인사, ITT, MPRI 등의 기업이 없으면 펜타곤은 전쟁터에서 작전 전개력을 발휘할 수 없다. 다인사의 최고경영자인 폴 롬바르트는 “우리가 없어도 미군은 전장에서 싸울 수는 있겠지만 더없이 곤란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전투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어 전쟁 과정에서 우리들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다.2)

다인사는 2002년에는 23억 달러 매상을 올렸는데 해마다 20%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어 앞서 말한 CSC의 계열사로서 거대화를 꾀하고 있다.

매일같이 치안이 악화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다인사의 기업전사들은 총을 휴대하고 특별임무의 병사와 함께 행동하기도 한다. MPRI는 크로아티아, 보스니아에서 군대를 훈련시키고 있고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펜타곤과 군·경찰대를 육성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이라크에서는 새로이 경찰, 재판소, 감옥을 재구축하기 위해 1천명의 고문단을 보내기로 하는 엄청난 액수의 계약을 부시정권과 맺었다. 게다가 미연방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마약근절을 위하여 필요한만큼의 자금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다인사와 계약을 맺었다. 마약근절 작전은 PMC의 전매특허로 콜롬비아에서는 미군기와 레이더망, 인공위성을 활용한다. 마약밀수를 적발하는데는 다인사를 비롯하여 노스롭 그라만 산하의 비닐·코프, 아리스찬 등 6개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펜타곤이 연 12억 달러를 지불한다. PMC들은 대기업(때로는 대기업산하)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다인사의 고용인 수는 2003년 현재 2만 3천명, 큐빅·애플리케이션은 4천5백명, MPRI는 상근 고용인만 6천명으로 1만명의 퇴역군인이 계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펜타곤은 PMC에 대해 연간 예산의 8% 전후(2002년에는 300억 달러)를 안정적으로 지출한다.

또 조지 워싱턴대학 국제문제 엘리엇 스쿨의 데보라 애번트 교수는 PMC 전체의 매상고를 1990년 556억 달러로 산출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2020억 달러로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단 여기에는 헬리버튼과 CSC, 시스템·인티그레이터의 CACI인터내셔널·디자인, 센서 기술회사인 크로스·봄테크놀로지, 데이터베이스의 거대기업인 오라클, 소프트웨어의 사이베즈 등의 민간기술기업이 펜타곤과 맺은 계약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은 성조기 깃발 밑에서 다국적기업화하고 글로벌 기업화한다. 매상규모가 GM과 포드를 합친 정도에 이르며 군산복합체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나간다.

#### 4. 립스펠드의 펜타곤 경영

PMC의 광범한 이용은 펜타곤 자본주의의 확대로 이어진다. 동시에 그것은 끝없이 제국을 확대하고 현지 나라와의 이해 대립과 충돌 속에서 앵글로·색슨의 보안관으로서 지배력 및 군사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미국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2차 이라크 전쟁 후 진퇴양난에 빠진 부시정권에 대해서 14만 명의 원정군을 철수시키라는 요구와 동시에 30만에서 50만의 증원부대를 보내 테러를 진압하자는 주장도 있다. 부시정권 내부의 국무부(파월 국무장관)와 네오콘파(울포위츠 국방부 장관, 리차드 펄 국제문제담당 대통령 고문)는 이 문제에서 대립하고 있지만 ‘제국’의 전선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이라크에 증원군 파견은 불가능하다.

미 육군 정예부대의 절반이 해외에 주둔하고 미군헌병의 90%가 해외에 주둔하고 있다.

미군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필리핀, 라이베리아, 우즈베키스탄 등 전 세계에서 대 테러전쟁, 평화 치안유지활동 등 여러 가지 ‘제국’ 보위의 임무를 맡고 있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펜타곤의 최고책임자로서 제복 군인을 늘리는데 따른 부담(재정적·정치적)을 지지 않고 미군사력을 늘리기 위해 보다 많은 민간인을 군대에 투입하고 PMC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2003년 7월 상원 증언에서 “남녀 30만명의 군인이 군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예가 있다”고 말하였다.

덧붙여 럼스펠드 경영의 펜타곤이 하이테크화·디지털화·네트워크화를 추진하면서 90년대 초기 이래 민간기술로 둘러진 하이테크 기술이 다시 군사기술에 응용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록히드마틴과 노스롭 그라만이 소프트웨어와 일렉트로닉 디자인에 주력하는 한편 인터넷 관련사업을 비롯한 민간기술분야에서 최근 성장을 이룬 휴렛팩커드, 오라클, 스프린트, 퀘스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신생기업들인 CACI인터내셔널·디자인(시스템·인티그레이터), 크로스·봄테크놀로지(센서 기술)도 다시 군사수주기업의 대열로 돌아오고 있다.

## 5. 군 석유 복합체

테러리즘과 반미운동이 높아가고 초초(超超)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전선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럼스펠드식 펜타곤 경영은 민간기업으로의 전투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신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부시-럼스펠드에게 군사전략을 자문하는 자들은 누구나 비즈니스맨을 겸한다. 최고 군사 정책고문으로 네오콘 대표인 펄(전국방부 정책고문)은 통신회사 글로벌·크로싱사와 국방데이

터 서비스회사인 오토노미사의 사외 임원이다. 퇴역 해군제독인 데이빗·E 제레미 씨는 테크놀로지·스트라디지사의 사장이다. 그는 해외미국대사관 방위의 우케하트·코프와 복합기업인 리튼·인더스트리지의 이사, TI나 만택·인터내셔널, 노스롭 그라만사의 경영자문위원, 군용통신기재의 마이텔 이사를 맡고 있다. 헨리 키신저 전국무장관·국가안전보장담당보좌관은 보험사의 큰 손인 AIG그룹의 자문위원, 중국의 해양석유개발(CNOOC)의 자문위원이다. 퇴역장군(해병대)인 존 시한씨는 백텔 인터내셔널의 수석 부사장이다. 외교 자문관인 브렌트 스코크로프트(포드 및 조지부시 정권의 국가안전보장담당보좌관 역임)는 국제 비즈니스·리스크에 대한 대응전략을 자문해 주는 싱크탱크를 경영한다. 텍사스 지역의 가장 큰 석유업자로 중동과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석유권을 확장하고 있는 레이리 한트씨는 자신의 한트 컨솔리데이티드사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헬리버튼이나 EDS(군사용 전자회사로 02년의 국방부 수주액은 4.7억 달러)의 사외 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확장 단계에 들어섰는데 PMC가 군사지원·서비스(병참·전투)의 20 ~ 30%를 대행하고 있다.

정부·펜타곤의 고위층이 이 군산복합체의 확장을 이끈다. 그 전형이 체니 부통령이 국방장관 시절에 육성하였고 자신도 그 최고경영자로 5년간 근무한 헬리버튼의 KBR인데 90년대 중반에 다인사, MPRI를 추월하여 PMC의 최선두가 되었다. 이 회사의 기업전사들은 미국의 첨단무기를 보수하고 사용방법도 가르친다. 이들은 이란,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보스니아, 아이티 등의 곳에서 미군을 뒤에서 뒷받침한다. 특히 KBR은 이라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폴·브리머 문민행정관을 비롯하여 미군점령당국의 행정관 1천명, 십수만명의 미군이 식량에서 주거에 이르기까지 이 회사에 의존하고 있다. 미 공병대 또한 KBR에 더욱 의존해 가고 있으며 석유 및 송유관의 복구, 보수를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최고액인 82억 달러 계약)

KBR은 1992년 당시 체니 국방장관 밑에서 자이르, 아이티, 소말리아, 코소보, 발칸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나라에 파견된 미군에 병참, 무기·식량공급 등을 제공하는 합계 12억 달러의 서비스 계약을 공병대와 맺었다. 1995년에는 체니가 헬리버튼-KBR의 회장 겸 CEO가 되었는데 위 계약이 두 배인 23억 달러로 증가했다. 1999년에는 사담 후세인 정권의 석유복구(체니가 국방장관 시절인 걸프 전쟁 때 파괴된 것이다)사업에도 손을 댔다. KBR의 최대사업은 99년 7월에 완성된 발칸반도 최대의 군사기지인 캠프 본스틸을 건설한 것으로 그 사업에 1천명의 미국인과 7천명의 알바니아인을 고용하였다.

이 기지는 발칸반도를 횡단하여 카스피해에서 흑해(불가리아의 아르가스항)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에 인접하고 있다. 캠프 본스틸은 체니가 밑그림을 그리고 2000년에 완성된 군사기지의 거점인데 KBR은 쿠웨이트, 터키, 우즈베키스탄에도 같은 의미를 가지는 기지를 건설한 실적을 갖고 있다. 헬리버튼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의 석유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체니의 업적을 ‘군 석유 복합체(the military petroleum complex)’의 대부라고 부른다.

발칸반도 남부에서 아프리카의 남쪽, 동쪽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키르키스탄을 포괄하는 군사거점에 위치하면서 중앙아시아와 중동에 2천5백명의 군베테랑 출신의 전문사원을 상주시키

고 있으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테러조직 퇴치작전 후이기도 해 탈레반과 알카에다 포로의 격리수용소(쿠바의 관타나모 기지)도 건설하였고 관리업무도 인수하였다. 이 10년 사이에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지역에서 싸우는 미군에게 식량·무기·주거를 제공하는 등 미국의 글로벌한 반테러리즘 작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체니 부대통령은 백안관의 제2인자가 되어 헬리버튼-KBR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헬리버튼-KBR은 ‘세계제국’ 미국의 최전선에 있는 미군의 중추기업으로, 군산복합체의 새로운 실력자가 되었다. 더욱이 이 회사는 국제석유자본이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러시아에서 벌이는 사업의 파트너가 되었다. 국방부, 국제석유자본, 헬리버튼은 철의 삼각지대를 이루고 있다.

## 6. 아메바 기업 신군산복합체

백텔, 비닐 코퍼레이션(75년부터 사우디에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국토방위대를 육성하였으며 미군과 석유, 송유선의 방위를 지원하였다), 에이홈 가버먼트 서비스(쿠웨이트 최대의 군사기지-이라크공격 거점을 운영), 다이나코프, MPRI가 전쟁 비즈니스 점유율의 증대를 노리고 있다. 슈와르츠는 “미국이 다음 전쟁을 치를 때 PMC가 군대 및 전투에 대한 지원, 평화 유지활동, 재건 사업에서 더욱 넓고 깊이 있게 대규모 활동을 하도록 하라”고 포춘지에서 주문하고 있다.

게다가 디지털 네트워킹의 고도기술산업 또한 아웃소싱을 수주하고 펜타곤의 핵심 지도부에 인재를 파견하는 등 신군산복합기업으로서의 노력을 넓혀 갈 것이다.

민간 사기업이 시장원리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전쟁을 비즈니스로서 수주하고 정부 말는, 18세기 이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형태의 군산복합체가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PMC가 아메바처럼 증식한다면 평화와 민주주의는 새로운 위기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번역 | 김현희국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통사 창립 10주년을 되짚어본다>

## ‘평화’와 ‘통일’은 하나!! 둘이 아니다.

임종철(평통사 공동대표)

10년 전, 젊은 활동가들 사이에 조금은 심각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당시 ‘범민족대회’를 성대하게 치르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1986년 ‘반전반핵 양키 고 홈!’을 외치며 분신 자결한 김세진, 이재호 두 청년의 죽음으로 이른바 ‘지구상에서 유일한 반미 무풍지대’로 알려진 이 땅에서 미국과 미군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되기 시작했고, 공해추방운동 진영에서 ‘반핵’을 주요한 이슈로 내걸고 핵발전소 반대투쟁을 확산해나가면서 반핵무기운동이 무르익으면서 반핵평화운동연합이 결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다 단체 사정상 활동이 위축되어 있었던 90년대 초반 활동가들의 마음 한편에는 본격적인 평화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미군은 한반도에 무수한 핵무기를 배치하고도 NCND(공정도 부정도 않는 정책)를 고수하면서 핵폐권주의를 강화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반핵평화운동연합은 매우 의욕적으로 출발하였다. 각 분야의 주요 활동가들이 핵문제가 어느 부문운동에서나 중요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서 많은 혁혁한 활동가들이 결집하여 크나큰 기대를 모았다. 지도부도 김남주 시인, 김현 교무, 손병선 선생 등으로 말 그대로 뽕뽕한 성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 외적인 집단행동은 별로 하지 않던 보건의료인들까지 90년도를 전후로 매년 반핵평화 보건의료인대회를 여는 등 분위기가 매우 고조되고 있었다.

하지만 손병선 선생이 정당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시고, 94년초엔 김남주 시인이 별세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반핵평화운동연합은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평화통일연구회와 반핵평화운동연합 핵심일꾼들이 통합을 결의하게 되는데, 한편에서 평화운동 대중단체를 추진중이던 또다른 핵심일꾼들과 의견이 갈려 토론이 격하게 진행되었다. 결국 반핵평화운동연합은 해체를 결의하고 통합된 ‘평화통일연대회의’가 결성된다.

별도로 ‘평화운동 대중단체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평화운동을 중심과제로 삼고 활동하려는 일꾼들은 통일운동과 병행하면서도 일면 구분된 운동영역으로서의 평화운동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1년간의 논의 끝에 여러 어른들(문익환 목사님, 조용술 목사님, 함세웅 신부님, 청화 스님 등)께서 강력히 하나의 단체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하시는 뜻을 받아 ‘평화통일연대회의’와 ‘평화운동 대중단체 준비위원회’가 하나로 통합하기로 결의를 모으게 되었다.

당시 실무준비를 맡고 있었던 필자는 사실 고민이 적지 않았다. 합쳐서 하나로 활동한다는 기본 취지가 전혀 부정될 수 없는 것이긴 해도 실제로는 ‘평화운동’이 통일운동에 묻혀 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강하게 있었다(실제로 통합 창립 이후 몇 년간은 8월 통일대회에 휩쓸린 것도 사실이다)

당시 홍근수 목사님과 중재에 나서신 김상근 목사님이 기독교사회연구원 목회실에서 담판(?)이 이루어졌다. 우선 지도부는 “각1인 + 여성1인”으로 한다는 점에는 쉽게 동의가 이루어졌다. 문제는 명칭이었다. “평화”와 “통일” 두 낱말이 꼭 들어가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고민이 갈리는 지점이었다. 결국 두 낱말을 필히 넣으면서 작명에 들어가 필자가 평화도 통

일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열어가는 것이므로 “여는”이란 어휘를 사용하자고 말씀드려서 결국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로 확정되었다. 그때 홍 목사님 “평통여사라, 좋네요.”라고 약칭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홍목사님의 진솔함이 엿보이는 대목.

1994년 6월, 많은 단체들에서 이견들이 생겨나 어렵던 시절,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의 통합단체로 출범하였다. 초대 공동대표는 홍근수 목사님, 문규현 신부님, 윤정모 작가님(여성) 이었다. 창립대회장은 종로성당.

창립대회장에서 먼저 홍근수 대표님 대회사.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선포합니다”. 1994년 북핵문제로 고조되는 긴장상태에서 평통사 출범이 갖는 의미를 짚으시고 분열도, 만족도, 휴전도, 굴복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한 결의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그날까지 밀알이 되고 불씨가 될 것을 선포하였다.

문규현 대표의 취임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쓰소서.”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남과 북 겨레 모두와 함께 평화를 향해 흘러가고픈 물방울 하나하나를 모아 거대한 평화의 강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자, 그리하여 평화만이 통일의 길이요 통일만이 평화의 길이라는 역사의 진실이 이 땅에서 구현되게 하자, 고 호소하였다.

창립선언문. “.....우리는 우리 땅 우리 겨레를 둘러싼 모든 전쟁추동세력의 음모를 저지하고 평화애호대중의 의지를 결집하여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군사비용확대를 복지비용확대로, 군사부패문화를 평화생명문화로 전화시켜나갈 것이다..... 민족자주통일만세! 평화군축복지 만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만세!”

이 인용문들은 지금까지도 지켜가고 있는 평통사의 창립정신이자 실천과제들이라 하겠다. 여기서 한번 짚어둘 것이 있다.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하나로 인식하고 역동적 상호보완관계를 쉽게 이해하는데 비하여, 6.15남북공동선언에 참여한 김대중 정부조차도 평화와 통일을 선택의 문제로 보았고 그 기류가 노무현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선평화 후통일’이라는 허구는 함께 평화의 큰길, 통일의 큰길을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동지, 동료, 동반자들 사이에서도 명쾌한 인식 없이 혼잡된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참에 한번 지적해두고 싶은 것이다. 평화와 통일, 태극처럼 양면동체인 두 가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두 가치 모두가 정체된다. 특히 단계론이 그 어떤 하나를 뒤로 미루어버린다는 개념이면 그것은 이미 허구로 전략하고야 말 것이다. “평화 가운데점 통일”이란 표기가 두 가치개념을 뭉뚱그리는 표현의 한계가 있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평화가 통일의 동력이고 동시에 통일이 또한 평화의 동력이란 역동적 상관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창립직후 초기에 “평통사가 노인정인가”라는 자조적인 말들이 있었다. 왜냐? 어르신들은 단심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비하여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함이 있었기에 나온 말이다. 이제 평통사는 젊다. 젊은 에너지가 넘쳐난다. 바로 재창립과 함께 젊은 일꾼들이 전국에서 결집하면서부터 평통사는 면모를 일신하고 활기찬 활동가단체로 재도약하였다. 그에 따라 실천활동들이 다채롭게 전개되었고, 수많은 모범사례들을 창출하였다. 이것이 10년 평통사의 자랑이다. 평통사가 창립때 선포한 것처럼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낼 때까지” 과제는 크고 작게 놓여있다. 10주년을 맞아 이를 풀고 열어가야 할 평통사의 역량을 기대한다.

손중욱(부친평통사)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야 뛰어 들고 없으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기로 한 일, 해야 할 일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평통사로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함께 평화와 통일을 열어가는 견인차로써 자신의 임무를 잊지 말고 전진합시다.

현지환(부친평통사)

요즘은 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국민의 다수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지식, 의견들을 접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 평통사 홈페이지는 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쟁과 실천이 워낙 많고, 그에 비해 일꾼이 적기는 하지만 회원들이라도 앞장서서 홈페이지 신경 쓰고 글도 많이 올리고 합시다.

임숙영(부친평통사)

저는 평통사를 알고부터 존경하는 분들이 무지 많이 생겼습니다.

선배님들 볼 때마다 더 열심히 살고 싶어지고 이렇게 값진 삶을 또 다른 분들과 나누기 위해 회원확대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경(부친평통사)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평통사의 끊임없는 투쟁이 언젠가는 민족이 승리하는 날을 끌어내리라 생각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함께 열심히 투쟁, 생활하였으면 합니다.

노철성(부친평통사)

며칠전 회사에서 하반기 총과업 찬반투표가 있었다. 왜 투쟁이 필요한지 사람들에게 열심히 얘기하고 다녔는데 투표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런 과정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평통사를 알게 되면서 이만큼 성장, 발전했구나. 노동자 의식도 생기고, 그래서 너무 기쁘다.’

“평통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며 내가 평통사 회원인 것이 너무 기쁘다.

임채경(부친평통사)

평통사 10주년을 추카하며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평통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보영(부친평통사)

평 : 평등한 세상을 바라며 이곳에 발을 디딘지 어언 7년~

통 : 통일의 그 길에 함께한 평통사 여러분.....

사 : 사랑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라종도(부친평통사)

평통사에 들어 온지 얼마 안 되지만 평통사 회원으로 10주년을 함께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10주년 축하드리고요. 무궁한 발전이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주영일(부친평통사)

평통사 창립 10주년 정말 축하 하고 감축 드립니다.

제가 회원이 된지 2년째지만 앞으로 평통사 창립 20주년이 되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평통사 핫팅!

최경순(부친평통사)

저 개인적으로는,

‘평통사’라는 이름이 통일의 다리에, 수많은 주춧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10년 동안 걸어 온 발걸음 보다 더 크고 힘 있는 발걸음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의 길을 함께 다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많이! 영~차!

배용한(안동평통사)

안동은 대단히 보수적인 지역이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평화, 통일을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이 어려웠던 시절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어 희망이 있습니다.

그동안 평통사에서 평화,통일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큰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평화, 통일 측면에서는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뜻을 모아 평화, 통일의 한길에 매진합시다.

지역에서도 힘닿는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제현(안동평통사)

주한미군 문제나 군사적 문제에 심정적으로 반대하지만 전문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평통사 회원이 되고나서는 구체적, 전문적으로 알 수 있어 기존의 생각에 확신이 되어 좋았습니다.

평통사가 군축 문제 등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통일운동에도 역량을 많이 실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일운동진영이 나쁘게 말하면 운동의 지향, 방식 등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평통사가 앞장서서 통합, 단결해가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최명호(전북평통사)

먼저 평통사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조건들속에서도 굳건하게 운동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온 평통사가 자랑스럽고 개인적으로 무한한 부끄러움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삶보다는 평통사와 함께 평화를 위한 길에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년후에도 우리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운동에 앞장서는 평통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박영천(전북평통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평통사의 1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10번째 생일을 더욱 빛내기 위해서는 모든 평통사 회원들이 지역을 넘어 더욱 화합하고 단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격려해 나간다면 우리 평통사가 희망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김대송(전북평통사)

한국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산 증인이자 기록으로서 평통사가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축하하며 평통사의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기필코 10년 안에는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10년 동안 우리 평통사를 이끌어 오신 두 상임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통사의 더욱 활기찬 투쟁을 기원해봅니다.

서정대(전북평통사)

제가 평통사에 함께 한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뒤를 돌아보면 그 동안 평통사가 이 땅의 평화와 통일, 자주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벌써 10년이 되었다니 너무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더욱 힘을 모아 싸워서 평통사가 이루려고 노력해온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하루 빨리 이루어냈으면 좋겠어요.

최영이(전북평통사)

평화와 통일을 위해 매진해온 평통사가 10주년을 맞이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평통사는 진지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일하는 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평통사의 회원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10주년을 맞은 평통사 더욱 더 모범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 нама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통사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학(인천평통사)

“자신을 많이 사랑하세요. 사랑은 결코 머무는 법이 없대요. 아마도 그 사랑이 넘치면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거예요.”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우리 평통사 회원들의 마음이 지금은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로 흘러가고 있는거 같아요. 저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평통사를 만났고,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려 합니다.

평통사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으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파이팅!!! 짱!짱!짱!

정송호(인천평통사)

인천평통사는 인천에서 7년동안 활동해온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가 몇 명의 회원으로 운영되어온 단체로써 보다 폭넓은 대중조직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열의와 의지로 평통사로 새롭게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민청노회때는 주위의 동료나 친구에게 같이 활동하는 회원이 되자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오지가 않았는데 전국화 전문화 대중화의 기치 아래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대중조직으로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면서는 회원도 늘어나고 전문적 지식도 하나하나 늘어나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통일운동에 앞장설 평통사가 될 수 있도록 나 역시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철(인천평통사)

자식에게 척박한 현실에 순응하며 적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모보다는, 보다 넓은 세상

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세상을 바뀌어나가고 있는 평통사 동지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다음 10년 내에는 분단조국을 자주적인 통일조국으로 바뀌어나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투쟁합니다. 짹짹-짹!! 통~일~조~국!!

김의숙(인천평통사)

추카추카해요!! 평통사가 벌써 10년이 되었다구요?

전 평통사 하면 먼저 인간적인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곳.. 그래서 더 오랜 시간 지켜올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평통사에 들어오게 된 것도 바로 낮설지 않음 때문일꺼예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 평통사가 자랑스럽습니다. 지금은 많은 것을 같이 하고 있지 못하지만 마음만 큰 평통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평통사의 10년을 축하합니다.

김선미(인천평통사)

평통사의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인천 평통사가 작년에 생겨서 그렇게 오래 되었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벌써 같은 길을 10년을 걸었군요. 홈페이지에서 그동안 평통사가 한 활동들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게으름 피우던 제 모습을 생각하니 부끄럽네요. 앞으로도 몸만 커지는 평통사가 아닌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마음도 정신도 한걸음 더 커질 수 있는 평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성덕(인천평통사)

나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타워펠리스"였다. 내 가족만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다. 남들이 부러워할 위치에 설 때까지 최선을...

그런 평범한 주부에서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갖게해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웃을 돌아보게 되었고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고민하게 되었다. 평화와 통일을 그리며 사람을 사랑하며 갖은 탄압에도 옳은 한 목소리를 내은 평통사.

10돌을 맞은 지금 작은 모습으로나마 일원이 되어있음에 자부심을 느끼며 더욱 바른 세상의 길잡이가 되는 큰 평통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김의균(인천평통사)

지난겨울 나는 가장 춥고 힘든 겨울을 보냈다. 1년여 간의 해고 싸움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지난 1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 나에게 전화를 하여 석남동의 곱창집에서 또 새해 첫날 송림동의 삼계탕집에서 한잔의 소주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던 사무국장의 인간의 향기로 그 춥고 길던 겨울을 이길 수 있었다. 평통사 언젠가 지나 인간의 향기로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

송원준(대전충남평통사)

언젠가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고의 시간 끝에 생긴 태백산맥이 하나의 산과 또 그 산 속의 작은 소나무로 이루어진 것처럼 평화를 일구어가는 이 투쟁의 역사속에서 낮은 산으로 그리고 작은 소나무 한 그루로 살자' 평통사는 이러한 수줍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입니다. 평통사의 활

동 모습을 대하여 또한 작은 실천을 하며 나 또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이 역사에 서 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수(대전충남평통사)(전국대학노조 충남대지부장)

노동운동과 평화통일운동을 접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활동이 바쁘다보니 평화통일운동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평화통일운동이 여유가 있어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은 평통사 활동에 거의 참가를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평통사를 통해 평화통일운동을 더욱 고민해서 노동자들에게 노동운동만큼이나 널리 보편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이규(대전충남평통사)

우선 평통사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저는 시민사회단체에는 관심은 많으면서도 제가 속한 수도회에 매이다 보니 실질적인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활동이 부럽기도 했는데 항상 마음만 있었지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초 대전 지역의 신부님과 목사님이 오셔서 대전 지역에 평통사를 결성하려는데 마음이 있느냐는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마음 안에 있던 것도 있고 해서 동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앞에 나서서 하기에든 여전히 처음 먹어 보는 음식처럼 주저하였습니다. 준비 모임에 참석하면서 전체적인 것에는 아니더라도 어느 한 부분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미숙하지만 평통사의 정신을 사랑하고 있고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평화가 정착 되었으면 합니다. 평통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요열(대전충남평통사)

평통사10주년축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화와 통일에 관한 한 평통사는 대단히 전문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통사의 상근자와 회원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헌신적이고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 같이 비전문적이고 느슨한 이가 어떻게 평통사 회원 노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투철한 평통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회원이 된지 1년여 시간이 지났네요. 저는 여전히 전문성이 부족하고, 느슨한 모양 그대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통사는 너그러운 품으로, 저 같은 사람도 평화와 통일 운동의 일원으로 받아 주고, 활동(?) 하게 해주었습니다. 고마울 따름이죠. 이제는 한 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 저와 같은 느슨이파 동지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전문적이지 못하고, 헌신적이지 못하지만 평화 통일의 길에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중들이 함께 하는 평화와 통일 운동,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장남희(서울평통사)

평통사여! 통일까지 영원하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통일의 역군! 쉽고 기쁨을 가지고 끈질긴 역동성을 지녔으면....

손윤희(서울평통사)

굳세어라 평통사여! 일당백으로 가열찬 투쟁을 하시는 동지들의 모습이 항상 든든하고 희망

참니다. 지치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십시오.

박정자(서울평통사)

벌써 10주년 정말 열심히 뛰어왔군요. 파이팅! 작지만 큰 힘으로, 평화와 통일의 그날까지 끈질기게 전진하는 자랑스런 조직. 힘든점이 많아도 많은 회원들의 힘을 믿고 지치지 말았으면~

박희정(서울평통사)

자주, 평화, 통일의 그날까지, 평통사여 쭉~~욱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의 힘을 만들어가는 평통사. 동지들 건강하세요. 건강해야 통일을 볼 수 있습니다.

남미영(서울평통사)

그 많은 투쟁의 시간들, 벌써 10년 세월이 흘렀군요. 함께하는 동지들의 힘과 사랑으로 우뚝 선 평통사의 당당함이 자랑스럽습니다. 축하! 또 축하! 똑똑하고! 애정이 있고! 힘차고! 부드러운! 그래서 더욱 빛나는 평·통·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맘속에 평화와 통일을 진정으로 바라는 소망이 가득하길!!

이종민(서울평통사)

열심히 살아가는 평통사.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는 평통사가 되었으면.. 정부가 주한미군경비 분담금 같은 데에 헛돈 쓰지 말고 국민위해 쓸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해야.

윤영일(서울평통사)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정 반대 싸움에 항상 앞장 서 오는 모습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젠 분회원도 많이 늘리고, 전국적 조직도 강화해서 미군을 철수 시키고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주은 (인천대 공대)

올해로 평통사가 창립한지 10주년이 되었네요. 처음 평통사를 만들었을 때 설레임이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중을 생각하고 더욱 발전하는 평통사가 되길 바라며....

평통사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통사가 지난 10년 동안 한국 평화운동 발전에 정말 큰 주춧돌이 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버팀목이 되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

자주평화통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평통사의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승하시고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 이호성집행위원장]

평통사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지난 10년 힘든 길을 걸어오면서 평통사가 끼친 공로는 지대할 것입니다. 올해는 부시의 재선으로 한반도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평통사가 지난날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에 힘차게 매진해줄 것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평통사의 10년은 한국평화통일운동사에 귀중한 족적을 남기리라 생각합니다. 척박한 분단의 현실에서 평통사가 쌓아온 10년의 공과는 앞으로도 무진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통사가 평화운동에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최선희 사무처장]

평통사의 10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0년간 평통사 식구들의 헌신적인 싸움으로 우리의 상상력들이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의 우리 역사나 삶의 현실속에서 보다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상상력이 평통사를 통해서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가수 정태춘]

## 용산협정의 위헌성과 굴욕성

미군문제팀장 유영재

이 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주관한 ‘용산기지 이전협정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줄인 것임. 자료 원문은 평통사 홈페이지 참조(편집자주)

### 1. 용산 협정은 위헌·불법 문서

#### 1) UA 국회비준 동의는 SOFA 기구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전형을 합법화해주는 요식행위에 불과

- UA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이기 때문임.
- 그러나 정작 UA는 비용총액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가 즐비함. 이런 조건에서 IA 이하 협약의 체결과 사업 집행의 모든 권한이 SOFA합동위원회에 위임되어 있음.
- 따라서 UA의 국회비준동의는 SOFA합동위가 협정을 실질적으로 해석하고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요식행위에 불과함.

#### 2) 용산 협정의 지위를 한미SOFA의 부속문서 규정한 것은 위법

- 용산협정은 IA 이하의 문서는 물론이고 UA도 SOFA부속문서로 되어 있음. 협정 전문의 근거법령에 SOFA가 명시되어 있는 점, “이전의 시행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다”(제2조)는 조항, 양국 대표 각 1인이 서명하는 일반적 국제관례와는 달리 양국 대표 각 2인으로 되어 있는 서명당사자 중에 양국 SOFA합동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 등이 그 근거임.
- 그런데 한미SOFA에는 개별 시설과 구역의 공여와 반환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 기지 이전과 관련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용산협정을 SOFA부속문서로 둘 법적 근거가 없음. 이런 점에서 용산협정은 SOFA와는 별개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것이 마땅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협정이 SOFA부속문서로 규정된 것은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SOFA를 통하여 용산협정을 제멋대로 요리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관철된 결과임. 위헌적인 90년 용산기지이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91년 문서를 통하여 합법화시킨 기구가 바로 SOFA합동위원회였다는 사실은 미국이 왜 용산협정을 SOFA부속문서로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보여주는 사례임.
- 독일, 일본 모두 SOFA와는 별도의 협정을 체결함.

#### 3) IA이하 문서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

- 용산협정은 처분적 성격의 조약이므로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세부내역까지 규정하여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60조 제1항 규정에 부합함.
- 그러나 용산협정은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문구를 담고 있는 UA만 국회비준동의를 받고

IA 이하 나머지 문서들은 국회 비준동의를 회피하고 있음.

- IA는 토지의 공여(제4조 나항), 시설반환연도(제4조 다항)를 규정하고 있음. 이 시한을 언제로 정하는 가에 따라 당해년도 예산지출 규모가 달라지므로 이는 국가의 재정부담사항임. 따라서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임.
- 잔류부대 부지와 시설 및 방호시설을 제공(제4조 바 (5)항)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체적 산정을 시설종합계획에 이루어면 국회 동의를 받는 조약에 의한 위임을 받아야 하며, 관련 비용도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
- LPP협정에는 캠프 그레이 이전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IA에는 한국 부담으로 되어 있음.(제4조 라항) 이는 LPP 내용과 모순되는 것으로서 LPP를 개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됨.
- 환경절차의 완료의 연기를 규정한 것(제4조 마항)은 UA의 위임 범위를 넘어 예외 규정을 추가한 것이므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
- 기술양해각서(E-MOU)의 작성은 시설종합계획(MP)의 선행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MP와는 달리 IA에만 규정되어 있음. UA에 비용 관련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정부담 규모 예측이 가능한 E-MOU는 마땅히 UA에 규정되어야 하고, 후속적인 국회 동의 절차를 보장해야 함.
- 이처럼 시설과 구역의 제공 등 구체적인 비용 지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IA 이하 문서들이 국회비준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헌법 제60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임.

**4) IA를 갑자기 SOFA합동위 문서에서 조약으로 바꾼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기만책이자, 협상의 오류를 자인하는 것**

- 정부는 SOFA합동위 문서였던 IA를 국무회의 의결 직전에 조약으로 바꾼. 즉,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를 SOFA합동위 문서로 그대로 두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 위에 위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를 얹어 조약이라는 형식을 갖추으로써 문서형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회피하고자 함.
- 이는 IA에 대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문서 형식의 오류, 즉 IA를 SOFA합동위원회 문서로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것임.
- 그러나 IA의 문서형식을 조약으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IA 이하 문서들이 국회비준동의를 받지 않는 한 협정의 위헌성은 벗어날 수 없음.

**5) SOFA합동위원회가 IA 이하 세부 협정을 체결하고 이전사업을 최종 감독하도록 한 것은 위법(제3조 제1항 외)**

- SOFA합동위원회는 “…… 본협정의 시행에 관한 상호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의기관”(한미SOFA 제28조 제1항)으로 설치된 기구임.
- 한미SOFA에는 기지 이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용산협정은 ‘SOFA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 아님.
- 또한 SOFA합동위원회는 ‘협의(consultation)기관’에 불과하므로 협정의 시행에 관한 절차적인 혹은 세부적인 사항만을 협의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그 범위를 넘어 국가간에 유효한 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

- 따라서 SOFA합동위원회가 IA 이하 세부 협정을 체결하고 이전사업을 최종 감독하도록 한 것은 SOFA합동위원회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임.

## 6) 위헌·불법문서인 90년, 91년 문서를 참조문건으로 합법화시킨 것은 불법

- IA 제1조 참조문건에는 정식 정부대표가 서명하지 않았고 국회의 비준동의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정부 내에서조차 위헌 논란이 제기되었던 90년 합의각서(다)와 양해각서(라), 그리고 미국의 강요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안기부 문건이 밝힌 91년 SOFA합동위 결의와 169차 SOFA합동위 회의록(마)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따르면 90년, 91년 문서들도 새협정과 마찬가지로 용산기지 이전사업 이행을 위한 참조문건이라는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음. 이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90년, 91년 문서들이 정식으로 합법화된다는 것을 의미함.

- 다만 새로 체결되는 UA와 IA는 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대체’(supercede)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하여 90년, 91년 문서는 새협정의 체결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문서들의 효력을 상실케 하려면 참조문건에 포함시켜서는 안됨. 이 문서들을 새 협정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참조문건에 포함시킨 것은 새 협정을 두고 한미양국 사이에 논란이 벌어질 때, 90년 문서들을 ‘참조’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임. 특히 90년 불법 문서를 합법화한다고 규정한 91년 SOFA합동위 결의가 참조문건으로 온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90년 문서는 효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2. 용산협정은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굴욕 협정의 전형

### 1) 이전비용과 관련한 굴욕성

① 비용 총액이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각종 모호한 규정이 산재하여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음.

- 우리나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면서도 비용총액이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음.

- 독일 라인마인 미공군기지 이전협정의 경우 비용총액은 물론 세부내역까지 명시되어 있고, 비용 상한 규정도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임.

- 제공해야 할 시설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

- ‘완전하고 안전하며 사용가능한 시설’(UA 4조 1항), ‘그 밖의 부지개발’(UA 4조 1항), ‘그 밖의 비용’(UA 5조 1항 다), ‘기반시설’(UA 5조 3항 가),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에 요구되는 임무와 기능’(UA 2조 9항), ‘삶의 질’(UA 2조 10항) 등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문구가 즐비하여 협정문으로서의 요건을 결여함.

② 시설수준의 향상을 명시한 것은 90년 협정에 비해 명백한 개악이며, 불평등 조항임.

- 협정은 “대한민국은 토지·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 양당사국은 …… 이러한 소요를 최적화하기로 합의”(제2조 제4항)하고, “연합작전능력, 전투준비태세, 삶의 질 및 합중군 군대인원에 대한 지원이 유지되거나 채고되도록

보장”(제2조 제10항)하기로 함.

- 정부는 시설수준의 ‘제고’의 뜻이 ‘유지’와 같은 뜻이라고 강변하고 있음.
- 그러나 시설수준의 ‘제고’가 명시된 UA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게 되면 그것은 미국에게는 ‘제고’ 요구의 권리를, 우리에게는 의무를 부여하게 됨. 이를 근거로 미국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부정할 법적 근거가 없음. 특히 사업의 구체적 실행이 SOFA합동위원회 이하 실무단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는 국회와 국민은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음.
- 이는 현 수준으로의 이전을 명시한 90년 협정보다 명백히 개악된 부분이며, 반사이론(거울영상이론)에 따라 기존수준으로 이전한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불평등한 조항임.

**③ 우리가 비용을 전담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방부 건축기준에 따라 한미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은 불평등 조항임.**

- 독일과 일본의 경우, 해당국의 책임과 권한 아래 그 나라들의 건축기준에 따라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함.
- 그러나 용산협정은 우리측이 비용을 전담함에도 불구하고 미국방부 건축기준에 따라 SOFA를 통하여 한미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항임. 이는 또한 필연적으로 비용 상승을 초래하게 됨.

**④ 시설을 추가 제공하기로 한 것도 개악임(UA 제4조 제1항)**

- 협정에는 90년에 없던 행정·의료시설과 C4I관련 항목, 임대주택 제공 등이 신설됨. 이것 또한 90년에 비해 개악된 부분임.
- 특히, SOFA가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개념에 설비와 비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예를 들어 미국이 고가의 의료장비를 요구할 경우 의료시설에만 최소 수천억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음.

**⑤ 천문학적 C4I비용 제공도 개악(UA 제5조 제3항)**

- 협정은 “▲ C4I 기반시설 제공, 기존장비 이전, 재사용 불가능 또는 교체보다 이전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대체장비 제공, 교체 장비비용은 9백만 달러 이내, ▲ 유엔사·한미연합사 C4I 성능향상 및 개발계획은 용산기지 이전과 별도로 추진, ▲ 미군전용 C4I성능 개선 비용은 미국 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C4I 기반시설의 경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를 요구하든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음. 게다가 SOFA의 시설개념에 설비와 비품이 포함되어 있고, C4I의 특성상 시설과 장비의 구분이 모호한데다 모든 사항이 SOFA기구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군 전용 C4I 성능 개선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조항 역시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미국이 C4I의 성능 개선을 명분으로 그에 걸맞는 기반시설을 요구할 경우 이를 들어주어야 함. 더구나 C4I 성능개선도 그 범위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이 성능 개선 비용부담을 우리나라에 전가하는 것을 명확히 규제해 주고 있지 않음.
- 유엔사·한미연합사 C4I 성능향상 및 개발계획은 용산기지 이전과 별도로 추진되기 때문에 한국의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함.

- 특히 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의 C4I가 구분되지 않고 한미연합사의 C4I라는 것이 사실상은 주한미군사의 C4I이기 때문에 미군전용 C4I 개선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한국이 그 비용을 다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큼. 미국이 협정에 자국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 미군전용 C4I 성능개선 비용마저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임

#### ⑥ 운송용역 제공(UA 제5조 제1항 나)

- 정부는 현물로 이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함.
- 그러나 독일과 일본에서는 미국이 이사비용을 부담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불평등한 조항임.
- 더욱이 정부는 이사기간 동안 미군요원의 식비, 숙박비, 일비까지 지급기로 함.

#### ⑦ 기타비용(UA 제5조 제1항 다)

- '기타비용'(miscellaneous costs)의 의미는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비용을 의미함. 이 개념에는 액수의 다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정부의 '소액'이라는 해석은 근거없고 자의적인 것임.
- 미국은 기타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토지·시설·이사비용을 제외한 이전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어떤 것이든 한국에 요구할 근거를 확보하게 됨.
- 독일과 일본은 기타비용이라는 항목이 없음.

#### ⑧ 영업손실권 및 SOFA외 청구권(UA 제5조 제2항)

- 영업손실권과 SOFA외 청구권에 대하여 협정은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어떠한 권리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명목에 대한 우리측의 보상 책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음.
- 협정에는 또 “합중국을 상대로 제기된 청구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청구는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주한미군의 행정적 해결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정작 미국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해외 미군기지에 대한 청구권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고 함.
- 또한 토지 및 시설·운송용역·C4I와는 달리 기타비용 항목에서 이 부분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측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영업손실권과 SOFA외 청구권에 대한 보상 의무를 삭제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이를 인정치 않고 있음

#### ⑨ 군인가족용 주택 제공(UA 제4조 제1항)

- 333채의 무상주택 제공 외에 미국이 임차 또는 리스하기로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984채대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이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 이는 협정 내용과는 관계없이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것임.
- 특히 미국은 1,300여채의 주택 외에 2, 3차 주택을 요구하고 있음.
- 협정에 미군요원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구절이 명시되어 있고, 올 봄에 용산기지에 평당 1천만원이 넘는 초호화아파트를 방위비분담금(276억원)으로 제공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수준의 주택을 요구할 것임. 이럴 경우, 주택제공 예산만 하더라도 수천억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음.

#### ⑩ 환경조항(UA 제2조 제8항, IA 제4조 마)

- 정부는 환경오염복구조항 시설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 SOFA환경조항은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에 대한 치유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강제조항도 없어 실효성이 거의 없음. 또 현장조사도 50일로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조사가 어려움.
- 한미양국이 복구 후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아리랑 택시부지의 경우, 그 구체적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더욱이 IA에는 환경절차의 완료 연기 규정을 두어 오염 원인과 주체의 확인, 복구를 어렵게 함. 이는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음. 독사평 기름오염에 대한 조사 복구가 사건 발생후 4년이 넘어도 끝나지 않고 있음.
- 독일의 경우, 복구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기지 반환 뒤 3년 이내에 확인되는 환경 파괴의 복구책임을 지우고 있음. 또 환경오염 검사를 위한 무제한 기지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

### 2) 대체부지제공과 관련한 굴욕성

#### ① 90년 협정 때보다 대체부지가 2배 늘어난 것은 명백한 개악임.

- 용산기지 이전부지 52만평은 90년 협정에 따라 국방부가 91년 12월에 국방부고시 61호로 고시한 26만 8천평의 2배에 이르는 면적임.
- 정부는 이에 대하여 91년 당시에는 용산에 남는 부대가 많았고, 평택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부대도 많았기 때문에 평택에는 많은 대체부지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함.
- 그러나 90년 합의와 현재 협정안을 비교해보면 이전부대의 종류가 거의 같다는 점에서 정부 주장은 거짓임.

#### ② 기지면적에 숙소용 토지 20만평을 포함시킨 것은 불법

- 숙소용 토지 20만평 추가제공은 미 군사시설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미국이 이 부지에 대하여 치외법권을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법률적으로 여의치 않자 한국 정부가 아예 대체부지에 편입해 불법·부당하게 제공한 것임. 특히 민간사업자의 임대주택을 기지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그 경위와 법적 근거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그 결과에 상응한 조치가 필요함.
- 토지 20만평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용적률 250%를 적용하고 50평짜리 숙소를 건축한다고 할 때, 1만채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규모임. 현재 주택 소요 1,300채를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주택부지를 제공한 것은 국민과 국회의 눈을 속여 2, 3차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협정에 얼마든지 명시할 수 있는 주택 규모를 특정하지 않고 “그 밖의 모든 소요 주택”이라고 표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임.

### 3. 용산 협정은 “임무와 기능에 따른 이전”을 명시하여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보장함으로써

## 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조약

- 협정에는 “이 협정의 목적상 “임무와 기능”이라 함은 상호방위조약상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미합중국 군대의 임무와 기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를 놓고 정부는 주한미군이 용산기지에서 수행하던 임무와 기능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우리 정부는 이미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초기 회의들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합의해 주었고, 2003년과 200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잇따라 확인하였음. 여기서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기동군화를 의미함. 미국의 이런 방침은 지난 9월 23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 청문회에서 토머스 파고 미 태평양 사령관이 “한강 이남 2개 영구 모 기지는 ‘한반도와 주변지역’ 양쪽 모두에 대해 전력투사 능력과 대응, 역지태세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데서도 확인되고 있음. NSC 고위관계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밖에도 투입될 수 있다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대세”라면서, “우리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발언한 바 있음.
- 따라서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기동군화에 대해서 한국과 합의한 미국으로서는 용산협정 상의 ‘임무와 기능’을 아태기동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의 기능과 임무로 해석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함.
- 따라서 ‘상호방위조약상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합중국 군대의 기능과 임무’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아무런 규정성도 갖지 못한 빈 문구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점에서 우리 국민을 눈속임하기 위한 기만적인 문구에 불과함.
- 주한미군의 아태지역군화는 대한민국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적용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제3조)를 명백히 넘어서는 위법임. 정부가 주한미군의 아태지역군화에 동의해 줌으로써 스스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용산협정 상의 주한미군의 기능과 임무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기능과 임무 즉 남한 방위의 임무에 해당한다고 말한다면 정부를 신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임.
- 벌써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방위조약의 재해석, 한미안보공동선언 제정, 주한미군 입출입 규정 제정 등의 시도를 펴하고 있음.
- 한미양국은 제36차 SCM회의에서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열기로 합의하였고, 지난 10월 26일 한미외무장관회담에서 차관급 ‘고위 전략대화’를 개설하여 2006년까지 ‘한미안보공동선언’을 추진키로 하였음.
-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및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을 위한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게 되면 용산협정 상 ‘임무와 기능’은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태기동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의 기능과 임무를 의미하게 될 것임.
- 한미안보공동선언 제정은 ‘미일신안보공동선언’ 제정과 함께 미국이 동아시아판 NATO 구축의 오랜 숙원을 이루는 결정적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의 최하위 국으로서 대중국 전진기지과 전세계 병참기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한미동맹이 침략동맹으로 전환되면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나아가 우리는 원치 않는 주변국의 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음. 이미 중국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따라서 아태지역군의 임무와 기능 수행을 위한 용산 기지 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아무런 규정성도 없고 오히려 미국의 의도를 합리화시켜 주게 될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공약 따위

의 표현을 넣을 것이 아니라 ‘임무와 기능’에 따른 이전방식을 전면 폐기하고 축소 통폐합 이전방식을 취해야 함.

#### 4.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반박함

##### 1)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가 먼저 요구했고, 먼저 요구한 측이 비용 전담하는 것이 국제관례라는 주장에 대하여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을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이므로 우리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국제관례라고 주장함.
-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 논의는 80년대 후반,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감축요구 등이 반영되어 시작된 것임.
- 우리 측이 용산기지 이전을 먼저 주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제임스 킬리 전 주한미대사는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1986년부터 검토됐다는 발언을 한 바 있음. 이는 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용산기지 이전 공약을 내걸어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1년 전임. 이는 용산기지 이전을 우리측이 먼저 요구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이에 대한 면밀한 자료조사가 필요함.
- 특히 현재의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른 것임.
- 설령 우리가 먼저 이전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음.
- 동두천의 캠프 넘블, 의정부의 캠프 홀링워터는 미국이 먼저 이전을 요구했지만 한국측이 부담하기로 했음.
- 독일 라인마인 미공군기지 이전의 경우 전적으로 독일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주력인 NATO가 21.6%의 비용을 부담했음.
- 이런 점에서 정부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다름.

##### 2) 용산기지 이전은 미 군사전략(GPR)과 관계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정부는 미국 군사전략에 따른 이전에 우리가 비용을 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용산기지 이전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주한미군을 평택권역과 대구·부산권역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부대배치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GPR개념에 따른 것임. “합중국 군대를 핵심권역으로 통합”한다는 협정 전문의 표현은 용산협정이 GPR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근거임.
- 용산협정에서 미국이 첨단C4I 구축, 대규모 미군요원 가족숙소 등을 요구하는 것도 GPR에 따라 주한미군기지가 주요작전기지(MOB) 이상으로 분류되면서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
- 또한 허바드 전 주한미대사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전세계 미군재배치 전략의 일환"이라고 발언하였고,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이 용산기지를 이전하려는 것은 세계전략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음.
- 정부는 현재의 용산기지 이전 논의는 GPR계획이 나오기 전인 2002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GPR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용산협상 미국측 수석대표인 리처드 톨리스 미국방부 부차관보는 "GPR은 (2001년) 9.11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2002년 이전부터 GPR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한 바 있음.

-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이 GPR과는 관계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잘못된 협상을 가리기 위한 변명에 불과함.

### 3) 협정 조항으로 비용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하여

- 정부는 ‘협정의 이행은 국내법에 따라 승인되고 배정된 자금의 가용여부에 따른다’는 규정을 국회의 비용통제 근거 조항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이 조항은 지출의 타당성을 따져 그에 따라 국회가 비용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 이를 협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임. 따라서 이 조항은 국회의 비용통제 장치로 볼 수 없음.
- 국회에서 매년 예산에 대한 의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이전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협정을 국회가 이미 비준 동의한 상황에서 세부적인 사업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예산 승인을 거부한다는 것은 중속적 한미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유효한 조약은 당사국을 구속하며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비엔나 협약 제26조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조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국내 사정을 들어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 4) ‘validate’가 비용소요에 대한 비토권을 갖는 의미라는 주장에 대하여

- “이전의 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시설, 용역 및 비용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유효성이 확인(validate)되고, SOFA합동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될 것”이라는 규정에 대하여 한국이 비토권을 갖는다는 의미라고 정부는 주장함.
-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validate’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진실임을 확인한다”, “사실관계의 존부 및 진위를 확인한다”의 의미로 사용되므로, 비용청구문서의 진실성 여부, 과다 계상 등의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미군이 요구하는 특정시설의 필요 여부 및 그 정도의 과다성 등에 대하여 그것이 협정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함.
-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측 수석변호사도 ‘validate’의 비토권을 부인하였음.
- 이는 우리가 이전비용 소요에 대하여 비토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 정부는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우리가 모든 비용 소요에 대하여 비토권을 갖고 있다고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있는 것임.

### 5) 협정에 총액 명시가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정부는 시설종합계획(MP)이 나와야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데, MP 작성에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협정이 먼저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MP는 목적예비비나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60억원(480만 달러)이 채 안되는 비용문제 때문에 MP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음.
- 정부는 또 협정에서 부지규모 및 위치를 확정해야 MP를 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협정이 체결되어야만 부지규모와 위치가 나오는 것은 아님. 한미양국은 이미 최초종합계획(IMP)을 작성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부지규모와 위치를 잡은 상태임. 정부가 협정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대체부지에 대한 실측에 나서는 것은 여기에 따른 것임.

- 독일의 경우, 협정에 MP를 반영한 세부내역까지 포함하여 협정을 만든 사례가 있음. 독일은 가능한데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절차나 과정이 문제라면 정부는 부지규모와 위치가 정해진 지금이라도 MP완성 때까지 협정 체결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비용을 정하여 협정에 반영하면 될 것임. 그래야만 미국의 무제한적 비용 요구의 위협성을 막을 수 있을 것임.
- 그런데도 협정 체결이 강행된다면 주한미군기지 재배치를 해외미군기지 재배치의 시범 케이스로 삼으려는 미국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임.

<<첨부자료 1>>

**용산기지 이전비용에 대하여**

**1. 정부 추산 이전비용 총액**

- 3조 9,571억원(부지매입비용 : 1,919억원, 건설비 : 3조 7,652억원)

**2. 용산기지 시설대체가치(PRV)**

- 1369.55(단위 : 백만달러, 1조 6,435억원)  
극동공병단 37.7 / 니블로 바락 10.4 / 용산 게리슨 1295.4 / 성남골프장 26.0
- 정부 추산 건설비 3조 7,652억원은 현 시설대체가치 1조 6,435억원 보다 2조 1,217억원이나 많은 액수임.
- 이는 '임무와 기능', '삶의 질', '시설수준의 제고'를 보장하기 위해 첨단 C4I, 대규모 미군 가족용 주택, 행정 및 의료시설을 제공하기 때문임.
-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기존수준의 이전으로 과도한 비용부담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음.

**3. 국내 대형 건설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본 용산기지 이전비용**

	용산기지 이전사업	삼성 기업도시 건설사업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건설기간	2004 ~ 2008년	2004 ~ 2009년	2005 ~ 2010년
주요시설	본부·행정·의료·지원시설 및 삶의 질 시설, 가족숙소, C4I기반시설 등	주거단지, 공공·상업·후생 복지시설,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업체 등	주거·교통·국가 중추시설, 문화·복지용지, 녹지 등
총부지	52만평	98만 7천평	2,300만평
총사업비	3조 9,571억원	1조 4,675억원	45조 6천억원
평당 건설비	761만원	149만원	198만원

<<첨부자료 2>>

**미 2사단 재배치 비용도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 높아**

▶ **주한미군재배치는 해외미군재배치의 시범 케이스**

- 미국은 아직 해외미군재배치계획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이며, 미국방부는 올해 말 해외미군재배치의 시설종합계획(MP)작성을 위한 안내자료를 해외사령부로 배포할 계획임.(GAO 보고서, 2004년)
- 그런데도 한미당국이 서둘러 용산·LPP 협정을 타결하고 주한미군재배치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는 것은 한국을 시범케이스로 삼으려는 의도임.

▶ **주한미군 감축 불구, 제공 부지 2배 증가**

2008년까지 주한미군 12,500명(대부분 미2사단)감축되는데도 불구하고 312만평이라는 엄청난 토지 제공  
이는 2002년 LPP 협정의 154만평보다 2배가 넘는 것임.

▶ **미2사단 이전비용도 한국부담 가능성 매우 높아**

- LPP개정협정에는 2사단이전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우리정부는 LPP 소요비용 중 우리측 부담액을 12.61억 달러(1조5,132억원)로 예상하고 있으며, GAO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미군재배치비용으로 2004~2007년까지 2.12억 달러를 부담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음.
- 그런데 LPP 개정협정에 따라 반환되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등 미 2사단 소속 17개 주요부대의 대체시설 가치만 해도 28억 7260만 달러에 이름.( ‘미국방부 기지구조 보고서’ , 2004년)
- 즉, 소요비용은 대체시설가치 28억 7260억 달러에 부지매입비 8,185억원(6억 3200만 달러)을 합산하여 최소 35억 460만 달러 또는 그 2배 이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한미양국이 부담하겠다는 금액의 합산은 14.73억 달러에 불과한 바, 그 차액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2002년 LPP협정의 국회비준 과정에서 국방부는 한미간의 부담비율이 45:55라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이는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미국측 부담으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로는 87:13로 이전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함.
- 국방부의 이 같은 거짓 보고는 주한미군기지의 통폐합 비용을 우리가 너무 많이 부담한다는 국민비판 여론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범죄 행위임.
- 또한 국방부는 2004년 완공된 용산기지 내 평당 1천만 원 상당의 초호화 아파트 60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대 주고서도 이를 미국이 부담한 것처럼 국민의 눈을 속임.
- 최근 미국이 용산협정에서 자국이 부담키로 명시되어 있는 C4I 현대화비용, 주택임대료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해 달라고 요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미2사단 대체부지 비용

은 물론 시설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